



캐롤린 맬로니 / Carolyn B. Maloney, 민주당

교육

질문: 역사적인 현상인 학교의 인종과 사회경제적 분리(차이)를 해소하는 다양성 제고 정책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당선된다면 연방 기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가?

답변: 나는 학교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노력을 지지한다. 나는 지원이 필요한 특정 커뮤니티에 적절한 재원이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관한 연방 정부의 자료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모든 공립 대학이 서류미비 학생들의 등록을 허용하고 그 학생들이 대학 입학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방 학자금 지원(FASFA) 제도에 관한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영어 구사 능력도에 제한이 있는 가정과 학생들을 돕기 위해 유아원과 중등학교(K-12 Schools)까지 보다 많은 연방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차별에 대한 연방 차원의 민권 보호 강화를 지지하며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이 직면하는 차별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Photograph from <https://maloney.house.gov/about/about-congresswoman-carolyn-b-maloney>)

총기 규제

질문: 총기 규제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만약 당선된다면 어떤 특정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답변: 나는 총기 규제법의 강력한 지지자이며 미총기협회(NRA)의 '명예의 훈장 (의원 평가)'에서 F 등급을 받았다. (총기 소유의 자유를 주장하는 NRA의 활동에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의원으로 분류되었다는 뜻). 나는 공격 무기의 금지, (총기 구입과 소유 시) 전면적인 신원 조회, 위험인물의 총기 소유 제한법 (Red Flag Law)을 지지한다. 나는 또한 총기 거래 단속, 총기 거래상의 허점 봉쇄, 책임 보험의 요구, 스마트 총기 기술 증진과 전국 즉석 형사 신원조회 시스템 강화를 위한 7개의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작성했다. 나는 총기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Brady Campaign)의 공식 지지를 받았으며 총기 문제의 환기를 요구하는 어머니들의 연합의 후보 (Mom's Demand Action Gun Sense Candidate)이다.

공공 의료 (헬스케어)

질문: 최근에 연방 정부가 공공 혜택을 받은 이민자는 이민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는 정책을 도입하려는 논의와 관련하여 뉴욕에서 이민자들이 계속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가?

답변: 나는 의료 혜택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라고 생각하며 모든 사람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양질의 저렴한 의료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바마 케어 (Affordable Care Act)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메디 케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지지한다.

이민

질문: 최근의 변화와 이민 정책을 바꾸려는 방안들을 감안할 때, 기존 이민 정책들 중에서 어떤 정책을 보호 (유지) 하겠는가?

답변: 나는 DACA의 재실행과 드림액트 및 미국에 거주하는 1,100만 명의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제공하는 포괄적 이민 개혁의 법제화를 강력히 지지한다. 나는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의 가족을 분리시키는 새로운 정책 하에 자녀들이 가족과 떨어지게 된 아버지들과 이민단속국(ICE)의 구금 시설을 방문했으며 이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려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나는 또한 이민자, 난민, 망명 신청자들이 공평하게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적체 문제를 반드시 대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 조사

질문: 2020년 인구 조사에서 대표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소외된 커뮤니티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답변: 나는 2020년 인구 조사를 보호하기 위해 의원들을 조직하고자 의회인구조사코커스 (Congressional Census Caucus)를 창설했다. 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구 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을 포함하려는 방침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가름할 법률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약 200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법률 의견서 작성을 이끌었으며, 인구 조사국과 법무부에 중요한 인구조사 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고, 시민권 질문을 없애고 (2020 Census IDEA Act) 대표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취약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구 조사 예산을 증액하는 (2020 Census Investment Act) 두 가지의 법안을 작성했다.



(Photograph from <https://www.surajpatel.nyc/eam/>)

수라지 파텔 Suraj Patel, 민주당

교육

질문: 역사적인 현상인 학교의 인종과 사회경제적 분리(차이)를 해소하는 다양성 제고 정책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당선된다면 연방 기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가?

답변: 나는 어떻게 우리의 공립 학교를 개혁하고 인종 차별을 철폐하는지에 대한 시차원의 토론을 갖게 되어 기쁘다. 나는 의회나 시장이 최종 제안의 도출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거나 교육자, 학부모, 학생들에게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타당한 이해를 제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중요하게는, 이 제안은 뉴욕시 공립 고등학교 학생의 단 5%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전혀 개선하지 못한다. 나는 뉴욕시 전 지역을 포괄하는 모든 학교의 자원과 성과를 향상시킬 전국 차원의 연방 기금으로 조성된 커뮤니티 학교 계획안을 지지하며 시장과 의회가 유사한 제안을 받아들일길 바란다.

총기 규제

질문: 총기 규제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만약 당선된다면 어떤 특정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답변: 나는 총기 거래상의 허점을 봉쇄할 전면적인 신원 조회를 실행하며, 중범죄자에게 총기 판매를 방지하고, 공공장소에서 광범위한 제한을 하며, 반자동 소총과 서프레스를 포함한 위험한 도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담은 보다 종합적인 총기 폭력 예방책을 강력히 지지한다. 나는 또한 뉴욕시에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사용된 총기가 어디서 유입되었는지 알아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원본 데이터 베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력한 총기 폭력 예방법을 보유한 뉴욕주와 같은 주에서는 원인의 출처가 뉴욕주 바깥이라 하더라도 우리 커뮤니티의 총기 폭력의 근원을 표적으로 설정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 의료 (헬스케어)

질문: 최근에 연방 정부가 공공 혜택을 받은 이민자는 이민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는 정책을 도입하려는 논의와 관련하여 뉴욕에서 이민자들이 계속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가?

답변: 나는 현재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 보험 업계를 응급 수술과 처방약부터 정신 건강과 치과 치료에 이르기까지 수용자 부담, 공동 지불이나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혜택이 제공되는 모든 사람이 메디케이드에 가입하는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이 제도는 모든 미국 거주자들에게 개방되어 공공 혜택 이용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다. 나는 목숨을 구명할 의료 혜택이나 치료를 구하려는 이민자들을 좌절시키거나 차별하는 어떠한 공공 혜택 이용 측정 정책에도 반대한다.

이민

질문: 최근의 변화와 이민 정책을 바꾸려는 방안들을 감안할 때, 기존 이민 정책들 중에서 어떤 정책을 보호 (유지) 하겠는가?

답변: 우리는 대규모 추방에 맞서 싸우고 보다 많은 시민권 취득의 길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나는 이민단속국(ICE)에 예산 배당을 하지 않고 현 행정부가 뉴욕자들을 표적으로 하며 매일 이 나라의 이민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를 박탈하라고 요구한다. 나는 또한 H1 비자프로그램과 같은 고급 기술 노동자 비자 및 난민과 망명자들을 포함하여 합법 이민의 경로를 반드시 개혁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자업무 적체 해소와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의 보호에 덧붙여 미국에 살고 있는 11,00만 명의 서류미비자의 시민권 취득은 반드시 포괄적 이민개혁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인구 조사

질문: 2020년 인구 조사에서 대표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소외된 커뮤니티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답변: 우리는 인구 조사의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을 허용할 수 없다. 그것은 뉴욕 같은 도시들과 이민자 대중의 투표력과 정치력을 희석시키려는 분명히 계산된 조치이다. 시민권 보유 질문은 심지어 시민권자들까지 포함하여 특히 이민단속국이 미 전역 50개 주에 걸쳐 서류미비자들을 표적으로 추방을 시도하는 현 상황에서 비시민권자 지인과 가족이 있는 사람들의 인구 조사 응답률을 떨어트리는 효과를 유발한다.